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빈곤율 5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전망

2010년 15.1%였던 빈곤율이 15.7%까지 높아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수가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는 경기가 나빴고 정부 사회안전망이 빈약했던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의 효과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2011년 센서스 조사결과가 이번 가을, 즉 대선(11월) 몇 주 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AP통신은 10여 명 이상의 경제학자와 싱크탱크 그리고 중립적이거나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성향의 여러 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즉 2010년 15.1%였던 공식 빈곤율이 15.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학자들의 경우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문제는 0.1%포인트 증가조차도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빈곤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업자, 교외거주자들에서부터 극빈자까지, 빈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양한 집단에 퍼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들이 갈

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실업수당을 다 쓰고 나면 더욱 취약해지게 된다. 교외 빈곤층의 증가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와 같은 정치적 경합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유권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직면하고 있다.

선거철에는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점증하는 빈곤층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실업보험, 저소득 의료보험(Medicaid), 사회복지 그리고 식품구입권과 같은 정부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조지타운 빈곤불평등공공정책센터(Center on Poverty, Inequality and Public Policy)의 피터 에밀만 부장은 중위 가구소득을 낮춘 요인들로 최근 불황뿐만 아니라 세계화, 자동화, 위주화, 이주근로자, 노조가입률 저하와 같은 장기적 경제변화를 지적한다. 1990년대의 강력한 경제성장에서도 빈곤율은 1973년의 11.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 낮은 수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4년 시작하여 저소득 의료보험, 노인 의료보험(Medicare) 그리고 여

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빈곤과의 전쟁의 결과였다.

2011년 예측치는 AP통신 인터뷰에 기초하고 있으며 앨런 베루브(브루킹 연구소)의 교외거주자 빈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입법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와 엘리스 글드(경제정책연구소)의 연방지출 분석을 참조하였다.

분석자들의 추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 빈곤층은 470만 명에 달했고 이는 6명 중 1명꼴이다. 10분의 1%포인트 증가한 빈곤율(즉 15.2%)은 1983년 빈곤율과 같고 1965년 이후 최고치이다. 가장 높은 수치는 1959년 기록한 22.4%인데 그때부터 정부는 빈곤율 통계를 내기 시작했다.

빈곤은 실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업률은 2010년 9.6%에서 2011년 8.9%로 개선되었지만 인구 대비 고용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많은 실망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빈곤지표인 식품구입권 등록자 수 역시 늘어났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 빈곤율은 향후 몇 년 동안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12.5%를 상회할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실업수당이 만료되고 실업률이 6% 이상을 유지하며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고치인 15%에서 16%가 최소 201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 교외 빈곤율은 이미 11.8%를 기록하였는데 2011년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 2010년에 15%를 기록했던 파트타임 또는 불완전고용 근로자들의 빈곤율은 더욱 증가할 것

이다.

- 사회보장 현금보조로 65세 이상 빈곤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로 유지될 것이다.
- 2010년 22%였던 아동 빈곤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분석자들은 또한 극빈자(빈곤율 50% 이하)가 최고 수준인 6.7% 가까이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전 현금수입만을 고려한 정부 계산에 따르면, 2010년 빈곤율은 4인 가족 기준 연수입 22,314달러(한화 약 2,576만 원), 개인의 경우 11,139달러(한화 약 1,286만 원)였다. 여기에는 자본이득 또는 주택소유와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식품구입권이나 세금공제와 같은 비현금보조가 제외되었는데, 이것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으로 상당히 늘어났던 것들이다. 식품구입권이나 세금공제를 포함하면 2010년에 9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선 위로 잡혔을 것이다.

빈곤퇴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1년 11월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와 RNS Religion News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 79%의 미국인들이 지난 20년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연방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사람은 67%였다.

저소득 의료보험 외에 식품구입권, 장애인 수당, 세금공제와 같은 주요 저소득보조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방지출은 1975년부터 1990년대까지 GDP의 1.5%로 대체로 일정하였다. 오바마의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실업수당과 저소득자들에 대한 세금공



제가 일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출은 2.3%로 높아졌다.

- 출처: Associated Press, 2012년 7월 23일자, 'U.S. poverty heads toward highest level in 50

years - The official poverty rate will rise from 15.1 percent in 2010, climbing as high as 15.7 percent, economists predict'

미국 : 신규채용 일자리 증가

8월 첫주 노동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가운데 현재 미국의 근로자 채용 수치는 최고 수준에 달해 노동시장이 회복세에 있다.

6월 말에는 전월대비 10만 5천여 명의 채용이 증가해 38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경기침체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9년 7월에 비해서는 16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났다.

5월의 일자리 증가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것이며, 이에 반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지난 6월을 포함해 세 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36만 3천여 개로 2009년의 28만 개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금번 정부의 일자리와 신규채용 조사 보고는 이미 여러 곳에서 인용된 월별 일자리 증가 수치가 발표된 후 한 달이 훨씬 지나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채용과 해고, 퇴직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

와 기업들이 새로 채워야 할 빈자리 수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신규 채용이 있는지가 주요 내용이었다. 최근 12개월 동안 정부의 예상 수치에 따르면 5,100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에 고용되었고, 4,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떠났다. 이 수치는 전체 기업체가 아닌 개인 단위의 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은 수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IBM 사의 뉴욕 지사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사로 옮긴 근로자는 회사 전체로는 변화가 없으나 조사에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자리로 옮긴 것으로 계상된다.

지난 12개월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는 1년 전에도 있었던 일자리 수의 39.2% 수준이며, 실직률은 전체 일자리 수의 37.8%에 달한다. 경기침체 이전의 연간 신규 일자리 수 비율은 이전의 일자리 수의 48.1% 수준이었으며 실직률은 46.1%에 달했다.

실직률로만 보게 되면 최근 노동시장 상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의 실직률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 오히려 이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함에 따라 실직률은 조금 증가했다. 이는 이전에 더 나은 직장을 찾아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었던 근로자들이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이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2010년의 높은 수준의 실직률도 경제위기 이전의 실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보다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실직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주로 기록된다. 기타 실직사유는 전근과 사망, 그리고 은퇴가 있다. 공공부문 실직의 약 1/5 정도는 기타 실직 이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대규모 해고를 피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조기퇴직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8월 11일자, 'A Hopeful Sign: Job Openings Rise'

미국 : 저학력 계층의 일자리 감소 지속

최근 미국 조지타운(Georgetown)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 이후 고학력층에서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 반면, 고교 졸업자 이하 저학력층 인구는 여전히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여에 걸친 금융 경제위기 기간 동안, 미국 전체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임금, 복지혜택 그리고 저축 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 명이 실업을 겪었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일자리가 있는 대학 졸업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대학졸업장이 없는 인구의 경우 오히려 경제회복 기간 동안에도 일자리가 계속 감소해 2010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20

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번 연구의 공저자이자 조지타운대학교의 교육·노동연구센터의 Anthony P. Carnevale 소장은 "기존의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위기 이전의 경제 상태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인구조사국과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기반을 둔 이번 연구는 미국 전역의 1억 4천만 명의 노동 인구를 고교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7년 말부터 최근의 2012년 초까지 가장 교육수준이 낮은 고졸 이하 학력의 취업자 수는 580만 명 이상 감소해 약 10%의 감소치를 보였다.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이 있었지만 고교졸업자 그룹에 비해 급격



한 손실은 아니었으며 2012년 초에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의 취업자 감소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대학 졸업 이상 그룹의 경우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취업자 감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취업자 수가 220만여 명, 대졸자 가운데 5%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는 고용통계조사(Current Employment Statistics)보다는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각의 조사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고용통계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 기간 동안 일자리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Carnevale 소장은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1980년대 이후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회복을 거치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말했다.

주로 저학력층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산업에서 이번 경제위기 동안 일자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났다. 또한 이들 산업은 남성 근로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제위기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경제회복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들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성 근로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더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희망적인 결과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 장기 추세를 역전시키면서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남성 인구가 더 많은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8월 16일자, ‘Job Losses Persist for the Less-Educated’

미국 : 고령층의 소득 크게 감소

은퇴연령에 이른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위기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소득 원천으로 이용해왔던 주택의 자산가치 감소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탓이다.

Sentier Resear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연령 인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년 전과 비교할 때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미국인들은 경기회복이 시작된 2009년 6월과 비교해 더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 2012년 6월의 가구소득 중간값은 50,964달러(한화 약 5,800만 원)로 3년 전과 비교해 4.8% 정도 낮은 수치이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2009년 6월의 소득 중간값은 53,508달러(한화 약 6,090만 원)이다.

소득 수준의 감소는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 12월의 소득과 현재 소득을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2007년 12월의 소득 중간값은 54,916달러(한화 약 6,251만 원)로 경제침체 이후 가구소득은 약 7.2%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소득의 감소 정도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가구주가 55세에서 64세의 연령대인 가구는 가장 급격한 소득의 감소를 겪고 있다. 지난 3년간 이들 연령대 가구의 가구 소득 중간값은 61,716달러(한화 약 7,025만 원)에서 55,748달러(한화 약 6,346만 원)로 약 9.7% 감소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장기간 실업의 지속은 이러한 소득 감소의 한 요인이다. 이들 연령층 인구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일단 실업 상태에 들어선 고령 근로자들의 재취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플로리다 주 사라소타에 거주하는 Jan Thomas (62세) 씨는 “나는 2008년에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재취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기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보장 연금을 일찍 받으면 66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보다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줄어든다.

젊은 연령층 또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의 2012년 6월의 가구소득 중간값은 2009년 6월과 비교해 8.9%가 감소했고 25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6.1%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최고령층인 65세부터 74세 인구

의 소득은 경기회복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령층 인구의 가구소득 중간값은 39,548달러(한화 약 4,500만 원)에서 42,113달러(한화 약 4,794만 원)로 6.5% 증가했다.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6,244달러(한화 약 2,987만 원)에서 26,991달러(한화 약 3,072만 원)로 가구소득이 2.8%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최고령층의 가구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최고령층 인구의 경우에 더 장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저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택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더 오래 참가했다는 주장은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주택경기 하락 시기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없다.

65세 이상 노동시장 참가 인구는 199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11.1%의 노동시장 참가율에 비해 201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16.7%로 크게 증가했다.

Sentier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 이후 소득의 감소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이 현상은 MIT 경제학과 교수 David Autor가 제안한, 고속런 근로자와 저속런 근로자의 일자리는 성장하는 반면 중간계층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노동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고교 중퇴자 가구의 가구소득 중간값은 경기회복



이전에 비해 5.3%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동안 대학 졸업자의 가구소득 중간값은 5.9% 감소했다.

반면에 고교졸업자 또는 대학 중퇴자와 2년제 대학 졸업자 가구의 소득은 더 크게 감소했다. 가장 큰 수준의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은 대학 중퇴자로 경기회복 기간 동안 9.8%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이와 같은 큰 소득의 감소는 학비 대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흑인 가구의 가구소득 중간값은 2009년 6월에 비해 11.1%가 감소해, 백인 가구의 5.2% 감소와 히스패닉 4.1%, 아시안 등 기타 인종 가구의 3.6% 소득 감소에 비해 급격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뉴욕타임스, 2012년 8월 24일자, 'Big Income Losses for Those Near Retirement'

유럽

스웨덴 : 적합한 교육 배경을 가진 구직자들에게 밝은 노동시장 전망

스웨덴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컴퓨터, 기술 및 식당과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부문은 높은 교육과 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에게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여러 직종에서 신규 채용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된 구인 광고는 금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국영직업알선소는 사업주들의 구인 필요성이 앞으로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에 고용인원은 약 5,000명 증가할 것이고, 2013년에는 추가로 약 15,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에는 전체 고용 인구가 약 93,000명 증가하였다. 국영직업알선소는 금년 채용 규모가 약 1,200만 명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약간 내려간 수치이다.

컴퓨터 및 기술 분야,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일자리 수의 증가는, 특히 컴퓨터 분야(예를 들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건축가)에 많이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여러 부문에서 컴퓨터전문가 및 공학기사들을 구하고 있다. 국영직업알선소의 통계에 의하면 컴퓨터 분야의 노동인력이 가장 부족한 상황

이다. 지난 수년간 컴퓨터전문가 및 공학기사가 될 수 있는 교육에 참가한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 전문성이 있는 간호원, 약사, 조제사 및 치과의사 등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의 배경을 가진 구직자들의 노동시장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력이 있는 간호보조원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유치원에 종사하는 인력은 계속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직업교사와 특수교사들의 노동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 상황이라 고등학교교사 자격증을 가진 구직자들의 노동시장은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교사 및 교직자들의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몇 년간 더 내려간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소비가 증가한 덕분에 서비스업 분야는 계속 확장 추세에 있는데, 이로 인해 호텔과 레스토랑 분야의 일자리 수가 앞으로 몇 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는 경력이 있는 주방장의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률은 계속 높은데, 이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여 이런 분야에 교육을 받은 인원도 많기 때문이다.



건설 및 건축 분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일자리
에 인력 부족이 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력자와 초
보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주택 건설의 규모는 감소
하였지만 대신에 대규모 시설 건설이 늘어나 건설
및 건축 분야의 인력 수요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인력
이 특히 부족한 직업은 박판공, 마루시설 설치가 및
상하수도관 설치가 등이다.

최근 스웨덴 제조업의 생산 규모가 감소하면서 제
조업의 노동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기계 조립가, 기

계 운전자들의 노동시장은 이미 상당히 침체된 상황
이다.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서 제한된 일자리 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화물차 정비사, 기술 전문가,
광산 근로자 및 제조업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는 높
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국영 직업알선소, 2012년 6월 28일자,
Pressmeddelande, 'Jobb för arbetssökande
med god utbildning'

스웨덴 : 고용인구 계속 증가 추세

스웨덴의 전체 고용인구는 급년 2012년 2/4분기와
지난해 동기를 비교할 때 2%가 증가한 426만 8,000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 임금 지급액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분의 고용인원
은 2.5% 그리고 임금 지급액은 4.3%가 증가한 반면
공공부분의 고용인원은 0.7%가 증가하였다.

2012년 2/4분기에 민간건설 부분의 고용인구는
7.0% 증가하였고 임금 지급액은 6.3%가 증가하였
다. 민간 보건복지 부분의 고용인구는 8.9%가 증가
하였고 임금 지급액은 8.0% 증가하였다. 또한 민간
서비스 분야의 고용인구는 3.2%만큼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제조업의 고용 인원은 2.0%
감소하였지만, 임금 지급액은 3.0%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공공부분의 고용인구는 0.7%가 증
가하였는데 중앙정부부분의 고용인구는 2.1%, 그리
고 임금 지급액은 5.2%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고용인

구와 임금 지급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기간에
중앙정부부분 종사자들에게 임금증가분이 소급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지방자치 코뮌의 고용
인구는 0.5%, 그리고 임금 지급액은 1.5%가 증가하
였다. 대규모 지방자치정부의 고용인원은 0.1% 증가
하였으며 총 임금지급액은 3.0% 증가하였다.

민간부분의 구직인원은 0.7%가 증가하였는데 이
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64,000명이 증가한 것
이다. 전체적으로 구직 인원이 79,500명으로 집계되
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1.5%가 증가
한 수치이다. 대신 제조업부분과 자원채취부분의 구
직인원은 16.4% 감소하였다.

- 출처: 스웨덴 통계청(SCB), 2012년 8월 21일자,
'Sysselsättning, lediga jobb och lönesummor,
2:a kvartalet 2012: Antalet anställda fortsätter
att öka'

영국 :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

올해 7월 들어 영국 서비스업의 성장속도가 느려졌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서비스 지수가 6월의 51.3에서 7월에 51로 떨어진 것인데, 이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성장을 의미한다. 이전 지수 예상치는 51.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7월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놀라운 결과이다. 영국에서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는 은행업, 호텔업, 식당업 등을 망라하는 광의로 쓰이는데, 이 지수가 올해 초 3월에 0.3% 하락하는 등 총체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서비스업의 성과는 최근 1년 7개월 이래로 최저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내 금융관련 정보회사인 Markit이 이번 주 초 조사를 수행한 후 발표한 결과로서 건설업에서 PMI 지수는 약간의 인상을 보였으나 제조업에서는 하락하였다.

코메르쯔방크의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딕슨은 이 수치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는 앞으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하였다. 수치는 여전히 50 이상으로 긍정적이지만 3분기 들어서 제조업의 하락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좋게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가 올림픽 준비로 인한 혼란(pre-olympic disruption)과 나쁜 날씨(bad weather) 그리

고 유로존 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HIS 글로벌 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인 하워드 아처는 나쁜 날씨와 올림픽과 관련된 테스트와 준비로 인한 혼란이 서비스 영역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보고서들의 주장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6월에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7월에는 약간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Markit의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슨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함께 볼 때에 PMI 지수가 2009년 4월 이래로 최저의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Markit의 조사에서는 영국의 모든 섹터를 반영한 전체 PMI 지수는 6월의 51.1에서 7월 49.5로 떨어졌다. 이 수치의 하락은 제조업의 생산량이 저조하였기 때문이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현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출처: 1. BBC news, 2012년 8월 3일자, 'Service sector output 'unexpectedly slows in July''
- 2. Guardian, 2012년 8월 3일자, 'UK service industry activity falls to lowest level in 19 months'



영국 : 림플로이의 장애인 근로자 파업 예정

글라스고(Glasgow)와 체스터 필드(Chesterfield)에 위치한 림플로이(Remploy) 공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직면하여 4일간의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의 노조인 GMB와 Unite의 조합원들은 이를 지원하고 8월 28일 거리시위를 할 예정이다. 림플로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이들의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로 영국 전역에 5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림플로이 공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45년에 준공되었는데, 이 회사는 가구나 전기제품을 제조하고 포장,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적자를 내고 있는 27개의 공장을 8월과 9월에 닫을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1,421명의 실업자가 생길 전망이다. 이 중 1,212개의 일자리는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림플로이는 총 2,85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7월에 림플로이의 54개 전 공장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24시간 동안 파업을 시작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 파업은 정부의 림플로이 공장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시도해온 노조 활동의 일환이다. 노조 GMB에 따르면 림플로이의 54개 공장 중 절반이 8

월 중에 이미 문을 닫았으며, 다른 18개는 내년에 닫거나 팔릴 예정이어서 남아 있는 공장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영국 정부는 근로자 개개인이 직장을 찾는 것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근로연금부의 대변인은 노조들의 파업활동이 림플로이의 직원들이 미래의 직장을 찾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였다. 정부는 8억 파운드(한화 약 1조 5천억 원)가량을 실직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다고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장 사업을 보조하기보다는 실직자 개개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림플로이의 54개 공장에서 근로자들은 5월에 이미 파업절차를 위해 투표를 실시하였다. 노조 GMB의 필 데이비스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그들이 실직과 빈곤상태를 죽을 때까지 견도록 방지하는 '종신형'을 구형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 출처: 1. BBC 뉴스, 2012년 7월 19일자, 'Remploy workers begin 24-hour strike'
- 2. BBC 뉴스, 2012년 8월 22일자, 'Remploy staff to stage four-day strike'

영국 : NHS 지역별 임금교섭 시동 거나?

몇몇 NHS(전국민의료서비스) 병원 트러스트들이 NHS의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의사, 치과의사, 고위 간부직 제외)하는 전국 단위 교섭구조(Agenda for Change)의 틀을 벗어나 지역별 임금을 도입하면서 임금은 물론 휴일과 병가수당 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남서부 지역의 20개의 NHS 트러스트들은 최근 ‘남서부 임금 및 근로조건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 컨소시엄은 이 같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구조의 변화를 통해 6천여 개의 NHS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20개 NHS 트러스트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총 6만 8천 명이다.

NHS는 중앙정부의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200억 파운드(한화 약 37조 원)를 절감해야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병원 트러스트들은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현재 68% 수준인 총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을 60%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컨소시엄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의 임금삭감으로 병원 인건비의 140만 파운드(한화 약 26억 원)를 절감할 수 있고, 계약서에 의한 주당 37.5시간에 더해 무급으로 1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260만 파운드(한화 약 48억 원)가량의 생산성을 달성해 낼 수 있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연차휴가를 이를 축소함으로써 75만 파운드(한화 약 14억 원)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병가휴가를 이를 줄임으로써 추가로 75만 파운드를 절감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참가 병원 트러스트들은

“NHS 사용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근로조건 변화 를 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자 보호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수 감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컨소시엄 대표는 “이들 보고서는 우리가 남서부 지역 NHS 병원들이 직면해 있는 전례 없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컨소시엄 트러스트들은 전국적 교섭(사용자 대표와 노조들 간의)을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건강한 NHS 조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편함으로써 (NHS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정리하고 필요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스텝들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로 인해 남서부 지역에서 최대 6천 명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인 유니손(UNISON)은 “전국 단위 임금 및 근로조건보다 낮은 지역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능력 있는 근로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지역별 임금이 전국적 임금교섭은 물론 근로자들의 의욕, 채용, 보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출처: 피플매니지먼트, 2012년 8월 23일자, ‘Unison slams NHS ‘pay cartel’ plans to slash wages’



영국 : 올림픽 개최 후에도 유연노동 유지 기업 늘어

지난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재택근무, 노동시간 변경 등의 방식으로 유연노동제도를 시행했던 기업들의 43%가 올림픽 개최 후에도 이 같은 유연노동제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십경영연구소(ILM)가 회원사 매니저 1,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기업 5곳 중 1곳꼴(18%)로 올림픽 기간 동안 새로운 방식의 근무형태를 도입했다. 응답자의 65%는 올림픽에 따른 업무차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했다고 밝혔고, 거의 절반인 48%는 올림픽이 자신들 회사의 경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니저들의 76%는, 올림픽 전에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재택근무는 게으름뱅이들의 낙원(skiver's paradise)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많은 매니저들은 올림픽이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절반(48%)은 근무의욕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는 비슷한 비율의 회사들(41%)이 사업장에서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매니저들의 37%는 올림픽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더욱 생산적으로 일했다고 답했고, 67%는 (올림픽 경기 공동시청 등으로) 직원들 간에

공유하는 경험들이 많아져 사업장 내 단결력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림픽이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들의 43%는 간부급 경영진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새로운 노동관행에 대해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답했다.

ILM은 “기업들이 올림픽 기간을 유연노동 관행을 시험해보는 기회로 삼았고, 그것이 일터를 게으름뱅이들의 낙원으로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으며,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관행하에서 생산적이고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ILM은 “우리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제대로 관리되는 유연한 고용관행을 이어가길 바라고, 이는 곧 영향력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재능 있는 인재들을 계속 보유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직 유연노동제를 시행해 보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29일부터 열리는 장애인올림픽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퍼스널투데이, 2012년 8월 24일자, 'Employers to continue Olympic flexible working practices'

영국 : 지방정부 연금개혁안, 노조 투표서 가결

지난해 11월 30일, 사상 최대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을 야기했던 연립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분야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노사가 합의안(Local Government Pension Scheme, LGPS 2014)을 마련했다. 이어 이 합의안은 최근 진행된 유니슨(Unison), 유나이트(UNITE), GMB 등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들이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대부분 압도적 찬성(유니슨 90%, 유나이트 84% 등)으로 가결되었다. 교섭에 참여한 각 노조들이 합의안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제도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2014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정부 근로자 연금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연금 급여액 계산방식이 퇴직 시 최종 급여를 기초로 산정되는 현행 제도(Final Salary)에서 생애평균급여

를 기초로 산정되는 제도(Career Average Revalued Earnings, CARE)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재평가 기준(Revaluation rate)도 최종보수 기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연금기여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장근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된다. 대신 연금지급률(accrual rate)은 1/60에서 1/49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합의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기여분의 50%만 내고 50%의 연금만 받는 50/50 제도도 포함돼 있다.

- 출처: 1. 퍼스널투데이, 2012년 8월 24일자, 'Unions back changes to local government pensions'
- 2. 유니슨 홈페이지, 'LGPS 2014 - 'At a Glance''

프랑스 : 간접고용 하락에 따른 전체 고용률 하락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프랑스 고용 현황은 농업분야를 제외한 전체 상업 분야에서 11,7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규모 고용 파괴 현상의 연장으로, 지난 1년간 프랑스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총 2만 9,600개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0.2%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 추세는 주로 간접고용(Intérim)

분야에서 비롯됐다. 올해 1/4분기에 700개의 일자리 감소에 이어, 지난 3개월 동안 1만 9,900여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INSEE는 “작년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고용 하락은 Pole emploi(고용센터)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6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간접고용 종사자들은



9%가량 감소했다. 간접고용 분야의 종사자 증감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가 전체 고용률의 선행지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상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고용 현황은, 건설과 서비스업에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1만 2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고용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며칠 전 노동부 장관 미셸 사팡(Michel Sapin)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26일, RTL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말이 오기 전에 프랑스 실업률이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에서도 10%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2년간의 고용 창출 계획을 언급했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8월 14일자 인터넷, ‘L’emploi salarié se dégrade, tiré vers le bas par l’intérim’
- 2. Le Monde, 2012년 7월 26일자 인터넷, ‘Michel Sapin: le chômage sera “sûrement” à 10% d’ici fin 2012’

* 주로 자동차 및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간접고용자의 수치 변화는 전체 성장률 및 고용률을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 그 이유는, 가장 유연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이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간접고용의 현황을 보면, 6개월 내지 1년 후의 전체 고용 사정을 전망할 수 있다.

** 유럽의 본토를 제외하고, 약 27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해외령까지를 포함하면, 프랑스 실업률은 올해 초에 이미 10%를 넘어섰다.

프랑스 : ‘미래의 일자리’ 법률안 제출, 9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

사팡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률안을 설명했고,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9월 10일로 앞당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일자리 만들기 계획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 변두리 지역에 사는 미숙련 젊은이들(교육수준이 낮거나 마땅한 기술이 없는 25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5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약 40만 명으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직업활동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조스팽 국무총리(1997~2002) 시절 발의된 ‘청년 일자리’ 계획과 다른 점이다. 국가는 이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의 75%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며, 관련 분야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협회,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녹색(환경)사업, 사회서비스, 디지털 부문, 관광산업이 될 예정이다. 또한 15만 개의 일자리 중 18,000개의 일

자리는 교육부에 특별 배당되었다. 대학에서 학사 2학년 이상과 석사 1학년에 해당하는(프랑스 고등교육은 학사 3년과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 구성된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장학금을 받고 있는)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미리 취업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 증가 소식과 경제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긴 이유 역시 현재의 고용문제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한 탓이다. 사광 장관 역시 “학업과 취업으로부터 떨어진 젊은이들의 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FO(노동자의힘) 대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사용자단체의 Medef 대표는 “나쁘지 않은 대책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8월 29일자 인터넷, ‘Les “emplois d’avenir” en conseil des ministres, sur fond d’envolée du chômage’
- 2. Le monde, 2012년 8월 29일자 인터넷, ‘150 000 contrats pour les jeunes en difficulté’



아시아

일본 :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 발생, 복지관련직 등의 처우개선이 최우선 과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6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0.82배로, 13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의 완전실업률도 전월대비 0.1%포인트 떨어진 4.3%로 개선되었지만, 최근 1년간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전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들 수 있다.

연고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대기업의 대규모 종업원 감축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종업종으로의 전직도 타 업종으로의 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25년간 근무했던 공장을 그만두고 1년 3개월째 실업상태에 있는 사이타마현의 한 남성(43세)은, 개호직으로의 전직을 고려하여 체험강습에 참가했지만, 결국은 적응하지 못해 전직을 포기했다. 이는 타 업종으로의 전직이 어려움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조업에 익숙해져 있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업종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아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구인이 많은 분야는 개호서비스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 및 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동 분야의

6월 신규 구인 수는 전체 신규 구인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14만 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및 복지분야의 경우 취업희망자가 구인 수를 크게 밀돌고 있는 등 인기가 없는 상황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계조립 및 엔지니어 등 제조업분야에서는 취업희망자 수가 구인 수를 상회하는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 제조업의 신규 구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한 약 7만 건으로 2년 6개월 만에 감소하였다. 대기업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원감축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의 신규 구인 수는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의 유효구인배율은 2008년 가을의 리먼쇼크의 영향이 있기 전인 2008년 9월(0.83배) 수준까지 회복되었지만, 실업률은 당시의 수준(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가자마 하루카 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 및 복지분야가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 의료 및 복지분야로의 전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단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어서만

이 아니라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매월근로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평균월급(상여를 제외하)이 약 31만 엔(한화 약 457만 원)인 데 비하여, 의료 및 복지분야의 평균급여는 25만 엔(한화 약 368만 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직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동 분야에 전직해서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어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간호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출처: 아사히신문 조간 7페이지, 2012년 8월 1일자, ‘雇用の需給、大きな溝福祉職など待遇課題 6月、失業率やや改善’

일본 :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실태

후생노동성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육아/개호법」을 2009년 개정하여 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는 2010년 6월부터 시행하였고, 실시가 유예되었던 100명 이하의 기업에도 2012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가정 양립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이 적용된 101명 기업을 대상으로 법 개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9년 개정된 「육아/개호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종업원에게 그 종업원이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종업원에게, 당사자가 희망하면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가족을 개호(간병)하는 종업원이 희망하면, 대상가족 1명(최대 2명까지)당, 연차휴가 외에, 연 5일간 개호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자녀 간호휴가의 확대

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 대해 자녀 간호휴가제도를 2명 이상까지 적용해 최대 10일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취득하면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2개월까지 취득할 수 있다. 여섯째, 남편이 부인의 출산 8주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취득하면, 2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곱째, 노사협정으로 전업주부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었으나, 그것을 폐지하였다. 참고로 넷째부터는 100명 이하의 기업에도 2010년부터 적용되었다.

조사는 종업원 10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2~3월 실시하여 1,603개 사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제도의 이용자가 늘었는지를 종업원 남녀별로 기업의 응답비율을 보면, ‘이용자가 늘어난 제도는 없다’가



남자 68.4%, 여자 39.3%로 법 개정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한 제도를 보면 '육아휴직제도' (여성 35.7%:남성 7.2%, 이하 같음), '단시간근무제도' (31.4%:2.7%), '자녀의 간호휴가제도' (18.0%:8.5%), '소정외근로의 면제' (8.5%:1.5%), '개호휴가' (8.4%:6.1%), '개호휴직제도' (6.7%:3.9%) 등이었다.

개정된 「육아/개호법」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일 가정 양립지원이 여성의 이직방지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고 있다'가 23.9%,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 30.8%, '특별히 관계없음' 31.5%, '모름/대상자가 없음' 12.1%로, 전체적으로 54.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직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를 취득하기 쉽

게 되었다'가 가장 많은 69.5%, '단시간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48.0%, '육아휴직제도를 길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7.4%, '자녀의 간호휴가 취득가능일수가 늘었다' 22.5%, '소정외근로가 면제 또는 제한되게 되었다' 14.8%, '잔업삭감이나 연휴취득촉진 등 근로형태 재편이 진척되었다' 11.7% 등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육아/개호법」 개정내용 시행 대상이 100명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앞으로 기업의 일가정 양립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平成23年度育児休業制度等に関する実態把握のための調査研究事業報告書(平成23年度厚生労働省委託調査)'

일본 : 노동계약법 개정안 성립 - 근속연수 5년 넘으면 무기고용으로 전환

전국적으로 약 1,20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자 및 계약사원 등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동계약법의 개정안이 지난 8월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동일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기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무기고용과 유기고용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은 1회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이 반복되는 등 근로자에 있어서 고용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중지를 제한하였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유기고용기간이 리셋되는 제도도 도입하였으며, 시행일은 정령에서 개정법이 공포되고 부터 1년 이내의 기일을 정하고 있다.

유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검토를 개시하였다. 근로자 측은 유기계약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를 계절적, 일시적

업무로 한정하는 사항 등의 제안도 내놓았지만 이 내용은 보류되었다.

• 출처: 마이니치신문 석간 10페이지, 2012년 8월 3

일자, ‘労働契約法改正案:成立 5年超で無期雇用に転換’

일본 : 사회보장 개혁의 미래상

일본 후생노동성은 8월 「후생노동백서-사회보장을 생각한다」를 발표하였는데, 이 백서에 나타난 일본이 그리는 사회보장 개혁의 미래상을 소개하도록 한다.

백서는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한 배경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첫째,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기반의 변화, 둘째, 가족형태나 지역사회의 변화, 셋째, 인구의 고령화, 현역세대의 감소, 넷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급속한 증가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부가 상대적으로 우대되고, 현역세대의 생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빈곤문제나 격차확대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고, 사회보장비용의 대부분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을 후세에 떠넘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성으로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육아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아동문제를 해소하고, 유아기 학교교육/보육의 종합적인 제공, 그리

고 지역의 자녀양육지원 실시를 포함한다.

둘째, 의료/개호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포괄 돌봄시스템을 확립하고, 의료와 개호보수를 동시에 개정한다.

셋째, 생활곤궁자 대책과 생활보호제도 재편을 추진하여, 빈곤/격차대책 강화(중층적 안전망의 구축)를 추진한다.

넷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한다.

다섯째, 기간제근로에 대한 법제도, 고령자 고용제도의 정비, 파트타임 노동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전원 참가형 사회/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실현한다.

그리고 여섯째, 소비세를 인상하고 연금의 국고부담을 1/2로 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재원을 확보한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2년 8월, ‘平成 24年版 厚生労働白書 - 社会保障を考える’



중국 : 베이징시,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 주민 양로보장 실현

베이징시는 사회보험제도 중 양로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처음으로 전 주민으로 하여 실시함으로써 국가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베이징시 전 주민 양로보험 적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였다.

2008년 베이징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신형농촌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노인보장”제도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베이징시는 2009년에 도농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였고, 도농 주민이 통합되어 하나의 제도에 적용되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도시 양로보험제도와 농촌 양로보험제도가 별도로 실시되고 있어 제도 분할 현상이 초래되었다.

현재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신

형농촌양로보험제도와 도시주민양로보험제도 등 2가지 양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중 도시주민 양로보험제도는 2011년 7월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국무원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말 2가지 주민양로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징시에서는 도농이 일체화된 주민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였고, 근로자 보장을 전 국민 보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도농이 이원화된 제도에서 도농이 일체화된 제도로 전환 중에 있다. 이로써 베이징시 전 주민 양로보장을 국가계획보다 3년 앞당겨 실현하였다.

• 출처: 新京报, 2012년 6월 22일자, ‘提前三年实现 养老保障全覆盖’

중국 : 23개 성급행정단위의 2011년 평균임금 순위

중국 23개 성급행정단위의 2011년 도시지역 재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베이징(北京)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4,672위안(한화 약 89만 원)이고, 그 다음이 상하이(上海)로 4,331위안(한화 약 83만 원)이며, 간수(甘肃)의 월평균임금은 가장 낮은 2,742위안(한화 약 52만 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멍구(内蒙古), 랴오닝(辽宁), 헤이룽장(黑龙江), 후베이(湖北), 허난(河南), 신장(新疆), 시짱(西藏), 구이저우(贵州) 등 8개 성(省) 이외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등 23개 성급

행정단위는 2011년 도시지역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발표했다. 이 중 베이징, 상하이, 쓰촨(四川), 허베이(河北) 등 4개 성급행정단위가 발표한 통계자료는 도시지역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이고(사영기업 포함), 나머지 19개 성급행정단위가 발표한 데이터는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이다(사영기업 미포함).

통계에 따르면, 23개 성급행정단위 가운데 베이징의 월평균임금은 4,672위안, 상하이는 4,331위안, 저장은 3,888위안(한화 약 74만 원)으로 1, 2, 3위를

지역	월평균임금	연평균임금	인상폭	지역	월평균임금	연평균임금	인상폭
베이징	4,672	56,061	11.2	푸젠	3,249	38,989	19.4
상하이	4,331	51,968	11.1	쓰촨	3,160	37,924	14.5
저장	3,888	46,660	12.4	산둥	3,061	36,737	8.9
장쑤	3,832	45,987	13.5	하이난	3,060	36,716	18.3
광둥	3,763	45,152	6.3	허베이	3,014	36,166	6.3
닝샤	3,715	44,574	13.9	후난	2,960	35,520	16.5
칭하이	3,541	42,493	14.6	윈난	2,949	35,387	17.0
티엔진	3,520	42,240	12.5	지린	2,850	34,197	16.3
안후이	3,387	40,640	11.9	광시	2,848	34,178	1.54
충칭	3,337	40,042	7.6	장시	2,838	34,055	17.1
산시(山西)	3,325	39,903	12.97	간수	2,742	32,906	10.6
산시(陝西)	3,254	39,043	7.7				

차지했고, 간수는 2,742위안으로 월평균임금이 중국에서 가장 낮았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국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재직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42,452위안(한화 약 812만 원)으로 2010년의 37,147위안(한화 약 711만 원)과 비교하면 5,305위안 증가했고, 동비 명목증가율은 14.3%, 증가폭은 0.8%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외하면 2011년 중국 도시지역 비사영단위 재직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의 실질증가율은 8.5%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평균임금수준 42,452위안과 비교할 때 베이징,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닝샤, 칭하이 등 7개 성급행정단위는 중국 평균수준보다 높았고, 이

중 베이징과 상하이는 5만 위안(한화 약 957만 원)이 넘었다. 전국 평균 실질증가폭인 8.5%와 비교하면, 산시(陝西, 7.7%), 충칭(重慶, 7.6%), 광둥(廣東, 6.3%), 허베이(河北, 6.3%), 광시(廣西, 1.54%) 등 5개 성급행정단위는 중국 평균수준보다 낮았다. 평균임금 실질증가폭으로 보면, 푸젠(福建, 19.4%), 하이난(海南, 18.3%), 장시(江西, 17.1%) 등이 증가폭이 높은 상위 1, 2, 3위를 차지했고, 이 중 푸젠의 2011년 평균임금은 2010년과 비교하면 19.4%로 23개 성급행정단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시는 1.54%로 가장 낮았다.

• 출처: 新华网, 2012년 7월 6일자, ‘23省份2011年平均工资排行 北京最高甘肃垫底’



중국 :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2년 연속 4.1% 기록

지난 7월 25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취업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2/4분기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1%로 연속 8분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노동시장의 총량모순과 구조적 모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하반기 취업난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1~6월까지 중국 도시지역 신규 증가취업자 수는 694만 명으로 올 한해 목표치인 900만 명의 77%를, 도시지역 실업자 재취업자 수는 294만 명으로 한해 목표치인 500만 명의 5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여건하에서 2012년 상반기 도시지역 신규 증가취업자 수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인칭지(尹成基) 대변인은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취업형세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세의 둔화로 하반기 취업형세는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HSBC 거시경제분석가 순쥘웨이(孫君玮)는 “2012년 2분기 통계를 보면 경제 하행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가 연속 6분기 하락하고 있고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농민공의 취업률이 2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감소했고, 임금인상률도 둔화되면서 농민공 계층에 대한 경제하행의 영향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취업형세도 비관적이다. 베이징(北京)대학교장 비서 황구이텐(黃桂田)은 “취업상황은 현재 악화되고 있다. 현재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고,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취업난이 은폐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 베이징대학의 취업상황을 보면,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도 예년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학 경제학원의 경우, 2012년 학부졸업생(유학생 제외)은 177명인데 이 중 64%는 중국 내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37%는 유학, 그리고 단지 8%만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다(光大)증권 거시분석가 허위엔위엔(何媛媛)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올해 2분기 중국 도시지역 신규 증가취업자 수가 단지 27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5% 감소했고, 2분기 통계치는 통계자료를 발표한 이래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시에 도시 노동시장 구인배율도 소폭 하락했는데, 이것은 취업시장이 이미 경제감소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은 늦게 나타나는 거시변수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이 반영하는 것은 한동안 이전 경제성장의 영향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감소를 감안하면 향후 취업형세는 확실히 낙관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 출처: 新浪, 2012년 7월 26일자, ‘城镇登记失业率连续两年没变’